

'U대회 선수촌' 광주시의회 가결... 남은 과제들

1000세대 넘는 영세세입자 이주 '난제'

원주민 재정착 늘려 광주시 부담 줄여야 30층 초고층, 경관·교통 부작용 최소화

광주시의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이하 선수촌 동의안)을 통과시키기에 따라 재건축을 통한 선수촌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내건설업계 1위인 현대건설이 참여하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도시공사까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선수촌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도 광주시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어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U대회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현금청산가구 중 10%를 초과해 발생하는 조합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일반분양을 한 후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물량의 10%를 사들여야 한다. 단 미분양 물량이 500가구 이상 발생할 때 1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가 25~30평형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69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 1채가 미분양될 경우 도시공사는 1억7250만

원에서 2억6910만원의 부담을 져야한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현금청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청산하는 데다, 재건축 전 11~19평형에 대한 감점평가액이 재건축 후 아파트보다 크게 낮아 조합원 분양가액과 현금 청산가액이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영세민이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최고 1억원에 이르는, 이주비(3000만원 예상) 및 보상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지 여부다.

정삼도 조합장은 "금융기관과 논의를 통해 금융지원 중도금 및 잔금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수립중"이라며 "현대건설과 논의중에 있으나 일반분양가를 800만원 선에 정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경쟁력

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40평형 이상 세대수를 없애고 소형 평형으로 재구성하면서 재건축 세대수는 3177세대에서 3727세대로 늘었다.

◇경관·교통문제 충분히 검토해야=주변이 대부분 저층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화정동 일대에 30층에 이르는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부하는 물론 경관 부조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시물레이션과 사전 실험 등을 통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세계의 대학생들이 선수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파트 단지 내외의 디자인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광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원 100여 명이 4일 오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을 의결하고 나오는 시의원들에게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야 의원들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첨단업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한 뒤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김정호, 민주당 이용섭, 한나라당 김성조, 이종혁 민주당 조경태 의원. /연합뉴스

지방의원들 '산집법 개정안' 저지 왜 나섰다 기업 5754개 수도권 몰려 지방 피해

비수도권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저지하기로 한 것은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일 지식경제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인용, "경기도는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5754개 기업이 들어오고 첨단업종으로 허용되는 업종의 경우 대기업은 기존 공장도 200%까지 증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경부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증설(500억 원 투자, 1000명 고용창출 효과) ▲KCC 여주 공장 증설(2조 원 투자, 3000명 고용창출) ▲프렉스코리아 용인 공장 신설(1180억 원 투자, 2200명 고용창출) 등 2조168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도 지경부는 국회에 공식 보고한 자료에 "첨단업종에 포함된 성장 유망업종 등 해당 기업의 수도권 내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며 "프렉스코리아가 용인시에 가

스제조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라고만 명시, "파급효과를 축소 보고해 지방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수도권에 다 주고 지방은 뭉개고 살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지경부는 보고서에서 "관계부처 협의에서 '이견 없음'"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대항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제출한 반대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질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현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사회·동반성장'의 가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4일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진행중인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마을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창조마을은 5개 자치구별로 각 1개 마을씩 시범마을이 선정돼 추진된다.

동구는 계림1동이 선정됐으며, '추억의 경양마을'을 애정으로 정하고 경양방죽터를 중심으로 옛정취가 묻어나는 추억마을을 재현한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와 빈집을 활용, 경양마을 사료전시관과 역사전시관 등을 조성하며, 추억이 넘치는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골목정원과 담장시화, 마

'행복한 창조조시 만들기' 본격화

광주시, 5개 자치구 도시재생 사업계획 확정

을화단 등을 조성한다.

서구는 상무 2동을 '쌍촌 하모니 타운'으로 정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생학공원을 개조해 조각공원과 갤러리, 공연장, 돔 시설물의 학습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소통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남구는 방림 1동이 선정됐다. '꿈꾸는 마을'로 조성되는 이 곳에는 빈집을 활용, 게스트하우스와 방림학당, 작은 도서관 등

'행복발전소'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이를 거점으로 추억의 스토리텔링 골목, 행복나눔운동, 마을축제 등 복지와 공동체조성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구는 임동이 '숲의 마을' 조성지로 선정됐다. 폐화분을 재활용, 마을 대부분을 녹색경로로 조성하며 광주전문의 자전거길을 신축 예정인 야구장과 연결, 저탄소·생태 자전거길로 조성한다. 특히 마을

내에 위치한 폐 시장을 예술인 창작공간과 마을 역사관으로 조성, 주변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 어룡동은 '자연과 역사를 가꾸는 박산마을'로 조성된다. 자연과 충효의 역사자원을 활용,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꽃·유실수·자생식물 육묘장 조성과 돌담길 복원, 충·효·열벽화골목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창조마을을 조성 사업별로 마을별 2억원씩 총 10억이 지원된다"며 "창조마을 조성 사업이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범마을과 협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해기기자 redplane

李대통령 "갈등 있는 국책사업 조속 결정"

과학벨트 등 신속 추진 시사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된다. 총리실 등 관련부처를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 논리보다 국민 권익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등 지역 갈등의 소지가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홍철 선임 지역발전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하면서도 국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름을 지어주세요

연합뉴스가 보도채널을 시작합니다

전세계 46개 지역에 취재망을 두고 6개 국어로 24시간 뉴스를 제공하는 연합뉴스가 TV 채널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영상뉴스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보도채널 이름 공모합니다	공모대상 : 연합뉴스 보도채널 이름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공모기간 : 2011년 4월4일 ~ 4월23일	당선포상 : 총상금 1,500만원

보도채널과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직종 : 간부직(취재데스크, 편집PD, 방송기술, 영상관리, TV광고/마케팅), 경력직(전문기자, 취재기자, 앵커, PD, 방송경영 기술, 광고기획·영업)

응시자격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경력 이상인 자

지원서 접수기간 : 2011년 4월 4일 ~ 4월 15일(경력직은 6월 채용 예정)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합뉴스 홈페이지 www.yonhapnews.co.kr (사원모집공고/보도채널 이름 공모)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